

2014. 6. 21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사회과목 C책형

문항	1	2	3	4	5	6	7	8	9	10
정답	①	④	②	④	③	③	②	①	①	②
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④	①	③	②	③	③	②	①	③	④

<총평>

작년 시험에 비해 난이도는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법파트에서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해 판례가 출제되었으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기본 소양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정치파트에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매키버의 관점을 묻는 문제가 다소 낯설어 보이기 는 하지만 이 또한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경제 영역에서도 모두 평이한 문제들만 출제되어 정답을 고르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사회문화 영역에서 난이도 높은 변증법적 유물론이 출제된 점이 특이하다.

<해설>

1. 정답 ①

①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우호통상항해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다.

② 국제법은 조약의 경우 개별 국가에 의해 체결되며,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경우는 불문법이므로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에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法源은 법의 존재형식이므로 성문법, 불문법이 법원으로 인정됨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이나 동일하다.

③ 국제법은 위반시 제재가 곤란하고 제재수단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정답 ④

① ㉠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총동문회는 이익사회로서 선택적 의지에 의해 결합된 집단이다.

③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이고, 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이므로 후자가 공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3. 정답 ②

계몽사상에 관한 제시문이다. 계몽사상은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① 근대 초기에는 소극적 자유가 강조되었다.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는 현대 국가에서 강조된다.

④ 시민혁명은 정치를 시민과 국가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4. 정답 ④

정부형태의 선택은 각국이 처한 역사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민주주의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5. 정답 ③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 본원소득수지로 구성되며, 자본·금융계정은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주식, 채권 투자), 차관 도입으로 구성된 금융계정과 해외 이주비, 채무 변제, 지적재산권 처분 등으로 구성된 자본계정으로 분류된다. 선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사례	분류	수취와 지급
독일로부터 차관 5억 달러 도입	금융계정	+ 5
미국에 휴대폰 10억 달러 수출	상품수지	+ 10
칠레로부터 과일 2억 달러 수입	상품수지	- 2
영국에 4억 달러 투자	금융계정	- 4
외국인 관광객 수입 3억 달러	서비스수지	+ 3

- ① 상품수지는 8억 달러 흑자이다.
- ② 금융계정은 1억 달러 흑자이다.
- ③ 경상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이다.
- ④ 이전소득수지는 선지에 없다.

6. 정답 ③

- ①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총수요가 감소하여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은 증가한다.
- ②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다.
- ③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정(+)의 관계로 나타나므로 <보기1>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④ 금리를 인하할 경우 총수요가 증가하여 <보기1>, <보기2> 모두 물가상승률은 높아진다.

7. 정답 ②

- ① B의 행위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작물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대법원 1998.01.23. 선고 97다25118).
- ③ 동물병원장은 동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④ A, B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8. 정답 ①

제시문은 사회명목론의 관점에 관한 것이다.

- 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명목론으로 분류된다.
- ② 뒤르켐은 실재하는 사회적 사실로써 사회실재론을 설명하였다.
- ③ 사회실재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 ④ 사회유기체설은 사회실재론으로 분류된다.

9. 정답 ①

- ② (나) 군소정당 난립시 정국 불안의 가능성은 의원내각제의 단점에 해당한다.
- ③ (가)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 ④ (나) 대통령제는 내각제와는 달리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시 그 해결이 쉽지 않다.

10. 정답 ②

15세 이상 인구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고용률이 하락하였으므로,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 / 실업자 수+취업자 수] 인데 취업자 수가 감소함에도 종전과 동일하다면 실업자 수도 감소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졌다. 반대로 비경제 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

11. 정답 ④

- ④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1항).

12. 정답 ①

수요의 가격 탄력성 = $\frac{\text{수요량 변화율}}{\text{가격 변화율}} \times 100\%$ 이므로 $\frac{18/300}{150/1000} \times 100\% = 0.4$

13. 정답 ③

(가)조직은 탈관료제, (나)조직은 관료제이다.

- ① 공식적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관료제이다.
- ② 인간소외의 가능성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 ③ 부서 간 경계가 분명한 것은 관료제이다.
-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한 것은 탈관료제이다.

14. 정답 ②

갑의 주장은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전제(보통선거)하에 투표의 수를 달리하자는 것이므로 표의 수적 평등을 위반한 것이다.

15. 정답 ③

- ③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국민이 위 헌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헌재 2000.4.27, 98헌가 16등).

16. 정답 ③

갑은 기능론적 관점, 을은 갈등론적 관점이다.

ㄴ.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실재론으로 사회구조에 대한 개인의 능동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7. 정답 ②

② 생산자 잉여는 $d+e+f$ 에서 f 로 감소하였다.

④ 생산자의 조세부담액은 개당 40원, 소비자의 조세부담액은 개당 60원이다.

18. 정답 ①

① 공공의 위험은 피해자가 승낙할 수 있는 법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택시를 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였다면 과잉긴급피난이 될 것이다.

②, ④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9. 정답 ③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관점이다. 갈등론이 대표적이다.

① 사회변동의 요인은 그 사회의 내부적 갈등에 있다고 본다.

② 사회적 삶 전반을 규정하는 토대는 물질적 생산 양식이라고 본다.

③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인 물질적 생산 양식의 반영으로 인식된다.

④ 경제적 요소에 의한 사회의 가치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중시한다.

20. 정답 ④

ㄱ. ㄴ은 평균적 정의(형식적 평등)의 사례이다. ㄷ, ㄹ은 배분적 정의(실질적 평등)의 사례이다.